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1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의안 번호	90
----------	----

제안년월일: 2022년 12월 12일

제안자: 사회건설위원장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8일(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2022. 11. 28.(월) ~ 12. 5.(월)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선유동1로 80, 5층 대회의장)	- 현황보고 및 청취	
2일차		- 서류확인	
3일차		- 개별감사	
4일차		- 동행정사무감사(2, 3일차)	
5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차: 신길7동 주민센터 감사 및 현지확인(감사1반) • 3일차: 당산2동 주민센터 감사 및 현지확인(감사2반) 	
6일차		- 5일차 교차감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	
오전	- 수감사항 정리		
오후	- 공개질의 및 답변		
		- 강평	

※ 토요일 ~ 일요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23년도 예산안 검토 등

6. 감사방법

-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실시
- 현황보고 및 청취
-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답변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지적사항

- 지적건수: 총 73건
 - ※ 우수사례: 총 4건
- 불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불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1. 28. (월)	이성수	<p>[수방용 양수기의 추가확보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잦아진 기상 이변으로 침수피해 주민을 위한 주민대여 수방용 양수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양수기가 필요할 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양수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대여 수방용 양수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해발생 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수방용 양수기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및 확인이 요구됨.
2	11. 29. (화)	이성수	<p>[클린하우스 무단투기 CCTV 운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하우스에 무단투기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CCTV로는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태료 부과 등)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CCTV를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태료 부과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해당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이 어렵다면, 클린하우스에 무단투기 단속원을 배치하여 무단투기 단속 시행. ○ 추가적으로, 클린하우스가 보다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순찰 강화.
3	11. 30. (수)	이성수	<p>[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의 청결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음식점에서 배출시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가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는 제도 및 단속 시행. ○ 대형업체에서도 수거 시 배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청결히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음식점 앞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불쾌하다는 민원 발생.	용기가 깨끗하게 수거될 수 있 도록 노력 바람.
4	11. 30. (수)	이성수	[전화통화 연결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 대응 개선] ○ 주택과 임대사업과 관련된 전화상 담 시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고, 콜백시스템도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	○ 콜백시스템 도입 등으로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때에는 추후라도 민원인에게 전화응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은 단순 민원응대는 별도 인원을 채용 하여 전화민원을 분산시켜서 직원들의 업무부담 감소.
5	11. 30. (수)	이성수	[대림2동 다문화경로당 신설 및 예산 지원] ○ 대림2동 다문화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 숫자가 과다하므로 제2다 문화경로당의 신설을 검토해야 함. ○ 아울러 다문화경로당(행복경로 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 대림2동 다문화경로당에 대한 현장방문 등 실태를 파악하여 제2다문화경로당 신설을 검토 해야 함. ○ 노인정 및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가 적 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적인관리를 요청함.
6	11. 30. (수)	이성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별 구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조직되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 예산지원 필요.
7	11. 30. (수)	이성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가절차 강화] ○ 지역주택현황을 확인한 결과 가칭 지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수였음. ○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곳은 별로 없었음. (현재 9곳에서 추진 중.)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주택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음.	
8	11. 30. (수)	이성수	<p>[관내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p> <p>○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적절한 채용 및 배치를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p>	<p>○ 어린이집의 정원 및 현원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보육교사의 채용과 배치.</p> <p>○ 어린이집의 통폐합 등을 통한 대형화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검토.</p>
9	12. 01. (목)	이성수	<p>[2021년 도시국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미흡]</p> <p>○ 2021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2018~2020년까지의 업무에 대한 도시국 종합감사에서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됨.</p> <p>○ 그러나, 도시국 소속 5개과에서의 조치결과는 직원교육, 환수조치, 부담금 재부과 등 사후처리에만 집중되고 있음.</p> <p>○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된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함.</p>	<p>○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에 결재과정에서 이중 확인, 팀장 등 결재라인에서의 상시적인 내부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함.</p> <p>○ 실무자에 대한 면담 실시로 업무과다로 인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적극 파악하고, 업무분장에 대한 재검토 필요.</p>
10	11. 28. (월)	전승관	<p>[영등포 자원순환센터 화재 등 예방 철저]</p> <p>○ 지난 11월 12일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화재 발생.</p> <p>○ 외벽, 방음벽 등이 심하게 훼손됐으며, 압축된 폐기물로</p>	<p>○ 야간 및 주말 당직 인원 보강 관련하여 관리업체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의해야 할 것임.</p> <p>○ 화재에 대비하여 소형 가전 등이 비에 맞지 않도록 비가림막이나 보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분리하여</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당시 당직 근무자가 부재하여, 인근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여 신고함. ○ 해당 지역은 발화 위험이 큰 폐기물들이 쌓여 있고, 인근에 녹지공간이 있어 더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큰 곳임. 	<p>보관하도록 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인 만큼 소방차량 진입로의 통행 장애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소화전 또한 화재발생 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
11	11. 28. (월)	전승관	<p>[통합관제센터 인력 및 외주화 등 운영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구의 관제 인력과 시설은 열악한 상황임. ○ 현재 영등포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1인당 1,352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적정 수준(1인당 50대)의 27배에 달함. ○ 우리 구는 관제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관제 업무 외주화는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에 허점이 생기는 등 위험 우려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월 3명을 추가 채용한 이후 인력 충원이 전무한 상태임. 1인당 1,352대의 CCTV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제 인력 확충 노력이 필요함. ○ 관제 업무는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구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하천, 공원, 외곽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우범지역을 구분하여 지능형 CCTV를 선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육안관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12	11. 28. (월)	전승관	<p>[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징수율 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10월 기준)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보험 가입은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의무보험가입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방안이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부과 건수가 3,181건(495,779천원)이며 이중 징수 건수는 2,071건(141,973천원)임.</p> <p>○ 미징수된 과태료는 약 353,806천원으로 징수율이 29.2%에 불과함(20년도 징수율 45%, 21년도 징수율 41%).</p>	<p>○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편의시책 적극 추진 및 재검토 등 원활한 징수를 위해 적극 힘써주길 바람.</p>
13	11. 28. (월)	전승관	<p>[서울시 공공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행로 확보]</p> <p>○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는 주민 만족도가 아주 큰 사업임. 다만, 특정 장소 및 시간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p> <p>○ 따릉이 관련 민원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24건, 2022년 55건이며, 특히 올해 들어 보행 불편으로 철거 및 정리를 요청하는 민원건수가 대폭 늘어남.</p> <p>○ 특히, 이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p>	<p>○ 철거 또는 정리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르신·장애인·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따릉이 거치대 인근 보행로 확보 등 주민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p>
14	11. 29. (화)	전승관	<p>[EM(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p> <p>○ EM은 생활 악취 저감, 하천 수질 정화는 물론 화학세제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 널리 쓰이고 있는 친환경 물질임.</p>	<p>○ 주민 수요가 많은 곳에 균형 안배하거나 EM 공급기를 확충하는 등 EM 보급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함.</p> <p>○ 친환경 정책만큼 EM의 유용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EM 보급</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 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EM 월 평균 배부량 405L으로 2021년 월 평균 배부량 704L보다 매우 저조한 편임. 	<p>사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임.</p>
15	11. 29. (화)	전승관	<p>[미혼모 보호시설(바인센터) 관리 감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인센터와 관련하여 설치신고서 사본에는 시설정원을 10세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영등포구청이 인허가를 최초로 0명으로 하여 설치 신고증을 발급함. ○ 수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에 관한 직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바인센터가 한부모가족 설치기준에 따라 기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에도 앞장서서 미혼모들이 홀로 고민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길 바람.
16	11. 29. (화)	전승관	<p>[기계식 주차장 사고 예방 위한 안전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기계식 주차장 점검결과 796개소 중 162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위반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관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교육 또한 제대로 받지 않은 곳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운영조차 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도 다수 적발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 주차장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관리인 배치, 관리인 보수교육 수료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감독 관리해야 함. ○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지자체는 건축주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편법운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	11. 29. (화)	전승관	<p>[환경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힘쓰는 환경공무원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유형별로 보면 근골격계가 가장 많았으며, 빠임, 부딪힘, 떨어짐, 베임 등으로 나타남. ○ 검은 봉투의 경우 뜯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봉투 속에 깨진 화분이나 거울, 또 무더진 칼 등이 있어 베이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임 방지용 장갑, 미끄럼방지 안전화, 경량 안전모 등 환경공무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의성이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방지를 위한 안전모 방한대 등 장비 지급에도 힘써야 할 것임. ○ 환경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18	11. 30. (수)	전승관	<p>[어린이 활동공간 유해환경 발생 점검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616개소 중 96개소를 점검한 결과 놀이시설, 어린이집 2곳에서 중금속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관내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르면 6곳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점검대상을 자체적으로라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중금속이 검출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경우에는 시설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석면 건축자재 손상 여부 및 석면 비산방지 조치 이행 여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여부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리모델링이 예정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석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할 것이며, 석면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9	11. 30. (수)	전승관	<p>[소방 출동로 통행 곤란(불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소방차 진입곤란 및 불가 지역은 총 26개 구간이며, 이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음. 도로가 협소함으로 인한 진입불가가 11곳, 진입곤란이 15곳으로 드러남. ○ 소방용수시설 점검결과 고장난 곳이 62개소,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17개소로 나타남. 	<p>날리지 않도록 감시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출동로 진입곤란 및 불가 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야 나가야 할 것임. ○ 소방서와 협조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현장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통행로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로공사 시 소화용수시설 매몰 및 파산 방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함.
20	11. 30. (수)	전승관	<p>[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 근절 총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임. ○ 국토교통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영등포구가 포함됨. ○ 특히 영등포동과 당산동에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 세대인 청년들은 다른 가구에 비해 거주 이동 비율도 높고, 부동산 계약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돼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총 72건으로 2020년 13건, 2021년 3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21	12. 02. (금)	전승관	<p>[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 운영 진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영등포구의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왔음. ○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자활참여자 성공률(탈수급율)은 저조해지는 추세임. ○ 사업 담당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자활센터 추가설치와 사무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참여자와 담당 실무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활근로자가 중도 종결되지 않도록 하고,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 자활사업 활성화와 함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영등포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자활사업참여자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향후 센터 추가설치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길 바람.
22	12. 02. (금)	전승관	<p>[아동학대 근절 위한 방안 간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관내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약 330건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로 신고로 판단됐던 사례 및 재학대 사례도 12건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내에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다가올 2023년(3년차)에 예정되어 있는 아동정책 활성화 고도화 계획 수립에 대해 재검토하여 실효적인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3	12. 02. (금)	전승관	<p>[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 관리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돌봄단은 취약계층 및 돌봄 사각지대에 농인 소외된 이웃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가구의 안부확인 및 가정 방문, 복지 플래너 연계 활동 등을 수행함. ○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별 배치인원, 관리대상자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정 동(18개동 중 6개동)은 가구방문과 지원 연계에 대한 실적이 전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자 및 동별 배치인원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여 지역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가구방문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람. ○ 우리동네돌봄단이 책임성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강화해야할 것임.
24	12. 02. (금)	전승관	<p>[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절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박탈감, 불안한 미래 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청년 정신건강의 예방적 점검이 요구됨. ○ 특히 영등포구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청년의 비율이 높아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임 ○ 영등포구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실적과 예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함. ○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조기 예방하고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진단과 연구조사 등 체계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함. ○ 이용자 실적이 다소 저조한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길 바람. ○ 서비스 불만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고 면밀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5	12. 02. (금)	전승관	<p>[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약 45개 단지) 최다 수준으로 화재, 지반침하 등 철저한 안전점검 관리가 요구됨. ○ 지난 9월 노후 공동주택 전기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심각(7개 단지), 보통(26개 단지), 양호(12개 단지)로 파악됨. 	<p>원인분석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관리주체가 함께 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것임. ○ 최근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돼 개선 및 설비가 필요한 보완사항을 관리주체에 정기적으로 안내 및 통보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기여해야할 것임.
26	12. 05. (월)	전승관	<p>[적정한 민원처리 및 시정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구민이 감사 청구한 것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청 측의 어린이 보호구역(당산1동 리드원 지식센터 근처 어린이집)의 불법 주차와 흡연 단속 거부의 건과 - 영등포 유통상가 인근의 불법 의심 주차장 단속 요청 거부의 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사안 1번(좌측의 첫 번째), 4번(좌측의 두 번째)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 관계 및 그 동안 처리과정을 빠른 시일 내 구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7	12. 05. (월)	전승관	<p>[영등포여성늘품센터 운영 중단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구민이 감사 청구한 것임. ○ 여성늘품센터의 운영종료에 대한 결정이 300여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몇몇 수강생 일동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였으나, 절충의 여지없이 기각되었다고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종료에 대한 취지를 수강생과 강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재 관내 유사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좌에 대해 기존 여성늘품센터에서 해왔던 강좌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람.
28	12. 02. (금)	남완현	<p>[장애학생을 위한 배려교육 및 지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장애학생 교육은 실시간 화상강의(zoom)와 콘텐츠 활용 강의, 과제 제출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하므로, 이러한 원격 교육에서 장애학생이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동급 장애인 교우에 대한 보호와 장애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장애우 멘토 및 지킴이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또한, 해당 교육 이수자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창수여(봉사점수인정) 및 자랑스런 교우상으로 뺏지를 달게 하는 등 장애학생 및 심신미약교우를 돕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바람.
29	12. 02. (금)	남완현	<p>[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녹음 시작 시에만 안내되는 녹음안내 멘트를 연결 시부터 안내하여, 민원인이 녹음될 수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부서를 비롯하여 구청 내 여러 부서에서 악성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신체적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음. ○ 현재 폭언 등에 따른 통화녹음을 시작할 때에만 녹음 안내멘트 후 녹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초 통화 연결 시부터 이를 안내하는 등 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타 지자체는 케이스형 녹음기, 웨어러블 캡 등을 지급하거나, 민원직원 보호조례 제정과 민원 대처능력 향상교육 등 직원보호 조치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p>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 민원인 대처를 위한 특별 교육과 훈련실시 등 공무원 보호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0	12. 02. (금)	남완현	<p>〔CCTV통합관제센터 관리문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을 통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관내 4,307대의 CCTV에 대해 각종 관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원은 단 3명뿐인 실태임. ○ 단 3명의 관제센터 인원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턱없이 부족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의 특성상 눈의 피로도가 증가함으로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4,307대의 CCTV가 있으나 단 3명의 관제센터 인원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예산확보를 통해 인력확보, 사무공간 및 휴게실 등에 공간에 대한 개선 필요. ○ 계속적으로 CCTV 대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모니터링 적정인력의 수요를 충족하는지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 필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1	12. 02. (금)	남완현	<p>[LED바닥신호등 설치 및 설치 후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바닥신호등을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주변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함. ○ LED바닥신호등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설치 3년 후 바닥신호등의 고장을 예상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4개소당 2,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고장제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고장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관리개선이 요구됨. ○ 향후 LED바닥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대안으로 경찰서와 부서의 협조를 통해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등 기둥에 적(赤)색, 녹(綠)색, 황(黃)색 신호를 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12. 02. (금)	남완현	<p>[아동 및 청소년 담당 부서 적극행정 및 관련 교육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청을 통해 문의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인지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중이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관한 인지감수성교육은 없는 실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관한 인지감수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시행바라며, ○ 학교폭력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온 경우, 학교 측의 소극적인 미봉책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학교행정 및 운영위원회의 소극적 대처). ○ 아동청소년 관련 공무원에게도 준사법권을 부여하여(경찰서와 협조) 학교보안관 및 선도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묵과하지 않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도록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신분 보장을 요구.</p>
33	12. 05. (월)	남완현	<p>[과도한 제한경쟁·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 배제에 대한 개선 교육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청의 전체 예산 중에서 푸른도시과의 공사(235건 중 68건, 28.94%), 용역(340건 중 93건, 27.35%)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22년 푸른도시과의 발주현황을 보면 전체 102건의 계약건수 중에서 일반경쟁은 3건(1억5천9백만원)에 불과하며, 수의계약 비율은 공사 74%, 설계 100%에 이르고 있음. ○ 푸른도시과의 전체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업체의 수주 비율은 공사 15% 미만, 설계는 20% 정도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긋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계약 발주를 위하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을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최소화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인지를 감사에서 재확인해야 함. ○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34	11. 29. (화)	유승용	<p>[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 이후 운영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1월 우리은행과 구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음. 물가 상승 등 시장경제가 불안정함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 등 통화정책 방향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는 우리 구의 세입금을 관리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의 보다 투명한 관리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하는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기에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탁금, 기금 등을 재조정하여 금리인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p>
35	11. 29 (화)	유승용	<p>[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신축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도로사업소(대지 7969㎡) 이전사업은 2017년 11월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197호)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으나, 2022년 3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의뢰 결과 반려되었음. ○ 2022년 4월 타당성 재조사(LIMAC) 착수하여,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진행 중이며, 2022년 7월 복합개발용도로 재검토 협의하였음. ○ 2022년 9월 서울시립과학관 설립을 위하여, 서울시 공공자산 담당관실에서 SH하고 신축에 따른 계획 수립을 검토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도로사업소가 포함된 대림역 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3년 전반기에 완료 예정이지만, 조속한 이전을 촉구함. ○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고 구로 디지털단지과 연계하여 벤처기업 유치로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역세권 환승역 상권 지역이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및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만일 공공개발의 한계성이 있다면 민간기업자본이나 SOC 자본유치도 검토.
36	11. 30. (수)	유승용	<p>[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807억원을 투입하여 신길동 대실빌라 앞에서 도림천 합류부까지 1,090m를 연장하고, 폭을 45m 확장하는 사업임. ○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서울시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장, 영등포구청장이 지방선거 출마 시에 주민에게 공약하여 당선되었으나, 서울시 복개구간별 평가총점에 따른 결과 사업순위가 30위권 내외로 판단하였기에 사업시행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이 평가순위를 조정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비 3억 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완료하였으나, 2022년 6월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p> <p>○ 용역비는 2022년 7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으나,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요청 시에 검토하겠다는데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음.</p>	<p>예비비를 통해 사용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p>
37	11. 30. (수)	유승용	<p>[서울지방병무청 부지의 메낙골 공원 조성 시 주민의견 반영필요]</p> <p>○ 메낙골 공원사업은 1940년 3월 총독부 고시 제208호로 최초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1998년 4월 서울시 고시 제1998-119호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음.</p> <p>○ 2020년 6월 병무청 이전 관련 협의에서 서울시 고시 제2020-251호와 와 2021년 4월 지구단위 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2022년 10월 지구단위계획 보완요청이 진행 중에 있음.</p>	<p>○ 2023년 6월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미집행으로 효력상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p> <p>○ 지구단위계획(안)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과 담장철거, 보행로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병무청 및 국방부와 조속히 협의해야 할 것임.</p> <p>○ 주민추진위원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와 공청회 실시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함.</p>
38	11. 30. (수)	유승용	<p>[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p> <p>○ 시비 50%, 구비 20%, 학부모 30%씩 분담하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시비 매칭은 6~10월까지의 5개월간 한시적인 지원에 그쳤음.</p> <p>○ 서울시는 2023년도 본예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고 예산심의 중 6억4천만</p>	<p>○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제29조에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초등교육의 무상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외국인 아동도 아동보육료를 지원받아야 함.</p> <p>○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및 공론</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칭비율 등 계상이 늦어지고 있음.</p> <p>○ 서울시는 2023년도 본예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고 예산심의 중 6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칭비율 등 계상이 늦어지고 있음.</p>	<p>화 과정이 요구됨.</p> <p>○ 외국인 아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23년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예비비를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고 2024년 본예산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39	11. 30. (수)	유승용	<p>[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신길7동 주민센터의 복지 관련 행정기구 신설]</p> <p>○ 2016년 이후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전입인구가 증가하여 2022년 10월말 현재 인구수 19,680명(26개통)이며, 기초수급자 209세대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1,004세대 (4,983)명에 이르고 있음.</p> <p>○ 현재 신길7동 주민센터에는 6급은 행정직렬로만 3명이 근무중이며, 복지팀장도 행정직렬에서 담당하여 복지직(전문직)에는 6급 근무자가 없음.</p> <p>○ 관내 주민센터 중에서 복지1,2팀 구분없이 1개 팀만 있는 곳은 신길 7동과 여의동뿐임.</p>	<p>○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신길7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인구와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다른 주민센터와 같이 복지팀을 복지1팀과 2팀으로 확대·개편하여 주민에게 최상의 복지행정서비스 제공.</p>
40	12. 01. (목)	유승용	<p>[‘모두휴야영장’운영 관련 대책 강구]</p> <p>○ 2019년 5월 오픈한 ‘모두휴’는 부지매입과 건립조성비로</p>	<p>○ 해당 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이지만,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문기관에 의한 민간위탁운영 검토.</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51억 원이 소요된 야영장으로 서 코로나19로 3년 동안 운영 상의 어려움 이외에도 홍보와 운영 전문성 부족으로 매해 적 자가 누적되고 있음.</p> <p>○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 제된 올해에도 이용 실적은 여전 히 저조하며, 내년에도 약 1억6 천2백여만 원의 적자가 예상됨.</p>	<p>○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 설 부지를 잠종지로 용도변경 후 매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청소년야영장을 구민의 휴 양소로써 산과 물이 있는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우수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p>
41	12. 01. (목)	유승용	<p>[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재 발방지 대책]</p> <p>○ 지난 9월 13일 신길동 모 어린 이집에서 4살 반 3명의 선생님 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일이 발생함.</p> <p>○ 그러나, 원장은 아동학대가 발 생했는데도 학부모에게 이 사실 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p> <p>○ 또한 원장은 경찰조사를 받기 도 전에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학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발생에 대 하여 공지를 요청하자 변호사 상담 후에 알려졌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함.</p>	<p>○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 점검 등 행정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사 건의 재발방지.</p> <p>○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 대 책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 한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의 대 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 실시.</p> <p>○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시 에 학부모면담 등을 통하여 아 동학대 발생사실에 대한 어린 이집 관계자들의 미흡한 대처 는 없었는지를 확인.</p>
42	12. 02. (금)	유승용	<p>[지역아동센터(개인시설) 운영 개선]</p> <p>○ 관내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과 후 돌봄이 필 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보호와</p>	<p>○ 아동복지법 제50조와 제52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서 아 동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자연인(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 가능한 것으 로 되어 있으나,</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교육서비스 제공 등 일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지역아동센터별 운영주체는 법인이 10개소, 개인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법인시설만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을 적용하여 운영주체별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가 상이함. ○ 구립과 법인시설은 전문기관에 의한 회계점검이 추가 실시되어 회계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시설 간의 아동들이 받는 돌봄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시설은 인건비 지원이 법인시설에 비해서 낮고 회계운영의 공공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어서 돌봄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 적용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기존 개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비영리법인화 시행 노력을 당부.
43	11. 30. (수)	이순우	<p>[어린이집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 의심·감염 우려가 있는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시키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해야 함. ○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 발생 사실을 전체 학부모에 공지하여 가정 보육을 하도록 권고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해야 함. ○ 그러나, 지난 8월 관내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이 발병하였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과 정보를 명확하게 공유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자 및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의 준수여부 확인 및 학부모 면담 실시로 의견 수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않고 적극적인 격리에도 나서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됨.</p>	
44	11. 30. (수)	이순우	<p>[공공급식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2월 실시한 공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추에서 포레이트와 프로사이미돈이라는 농약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 후 공급중단 조치됨.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공공급식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9,983건 중에서 부적합판정은 0.12%에 해당하는 12건에 불가함. ○ 특히 잔류농약 검출사례 12건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자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급중단 조치 이외에 다른 납품처에서의 동일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업체에 생산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가능한 생산자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납품업체에서 새로운 생산자와 거래 시에는 자체적인 잔류농약 검사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등의 납품절차를 보완할 것.
45	11. 30. (수)	이순우	<p>[공공급식 식재료의 클레임 처리 내역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급식 식재료의 클레임 처리내역은 2019년 91건 189만 원, 2020년 467건 729만 원, 2021년 538건 911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식재료품질 및 식품위생 문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업체에 보다 정확한 업무 처리로 배송오류·포장불량·품질 불량 등의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전에 자체검사를 강화하도록 지도. ○ 동일한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납품업체 교체 등도 검토.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환불 처리된 건수가 385건 5백 6십2만 원에 달하고 있음.</p> <p>○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클레임은 불필요한 업무의 발생으로 시간낭비와 함께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우려됨.</p>	
46	11. 30. (수)	이순우	<p>[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분야 전문가 부재]</p> <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제2항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p> <p>○ 그러나, 2022년 11월말 현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경력사항 확인결과 기금 분야의 민간전문가는 전혀 참여 하지 않고 있음.</p> <p>○ 기금분야 민간 전문가의 부재로 인하여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기금운용 수입금이 적으므로 기금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p>	<p>○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위촉할 것</p> <p>○ 기금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촉을 통하여 기금운용수입금 증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p>
47	11. 30. (수)	이순우	<p>[경로당 중식도우미의 부실 운영]</p> <p>○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당일 근무해야</p>	<p>○ 중식도우미에 대한 정확한 근무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미등록 인원의 근무여부와 등록인원의 실제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할 중식도우미가 근무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인원(차명으로 등록)이 중식도우미로 근무하는 등 지적사항이 발견됨.</p> <p>○ 그러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도 경로당 관계자들의 해명만 듣고 실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음.</p> <p>○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동일 회원 수가 등록된 경로당인데도 운영비에서는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음.</p>	<p>관리·감독해야 함.</p> <p>○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인원수 또는 면적에 따른 지원 등)을 명확히 만들고 이를 고지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p>
48	12. 01. (목)	이순우	<p>[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무요원 관리]</p> <p>○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업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p> <p>○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무요원들이 복지업무에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관리하여, 사회복지무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운용해야 함.</p> <p>○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들의 근태와 복무교육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1차적으로 해당 복지시설에 맡기고, 선별점검만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에게 사회복지무요원의 근태 등 전반적인 근무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이를 사회복지무요원 관리일지에 기재.</p> <p>○ 해당 부서장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시에 사회복지무요원 관리일지를 확인하여, 시설에서 평소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재확인.</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9	12. 01. (목)	이순우	<p>[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예산의 미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4년 35곳에 달했던 성매매 집결지가 2021에는 15곳으로 줄었는데, 이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감시가 강화되고, 재개발 열풍이 밀어닥친 결과임. ○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우리 구에서도 2019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난 3년간 해당 사업 예산편성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전주시에서는 2017년 4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4년간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지원한 결과 88명이나 되던 종사자들을 지난해에 10명으로까지 감소시켰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와 종사자들을 위한 자활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사업추진.
50	12. 01. (목)	이순우	<p>[어린이집 자동심장충격기의 추가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24곳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AED)가 설치된 곳은 8곳에 불과하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곳뿐임. ○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등 대부분 공공장소이며, 어린이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의 위급상황 발생 시에 빠른 조치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라도 어린이집에 자동심장충격기의 확대·설치(보급)를 검토.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근무자들이 인근의 AED 설치 위치를 정확히 숙지하여 사고 예방조치 강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모두 3만7,369건으로 사망사고도 38건 발생하여, 한 해 평균 약 7,473건, 하루 평균 20.5건 정도가 발생하였음. 	
51	12. 01. (목)	이순우	<p>[보육지원과 명칭 변경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육지원과에서는 보육, 여성친화,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부서의 명칭은 보육지원과로 되어 있음. ○ 이는 자칫 보육이 여성 고유의 업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사업과도 맞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1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의하면 사업부서 명칭에 복지, 지원 등을 빼고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흔히 사용하는 다문화 대신에 다누리정책팀, 다누리지원팀이라는 명칭으로 선임전과 편견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해당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보육지원과도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여성가정과,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과 등으로 변경 검토.
52	12. 01. (목)	이순우	<p>[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기준 관내의 무(無)허가 및 무(無)신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555건, 부과액은 20억 5천9백만 원에 달하고 있음. ○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에서 실제 징수 건수는 2,445건 (95.7%), 징수액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강제금은 공적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시부터 고발 예고하는 등 공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 촉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19억4천2백만원 (94.3%)로 미징 수금액은 1억1천7백만 원으로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1월 24일 영등포구청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발표하였으나, 10·29 참사 이후의 뒤늦은 사후조치라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필요.
53	12. 02. (금)	이예찬	<p>[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규정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은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시 디자인 기법임. ○ 2017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범죄예방 도시 조성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가능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는 서울시의 사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의 환경적 패턴과 국지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도시 디자인을 통해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속한 범죄예방 전문가가 관련 심의와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건축물, 도시설계 과정에서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담장의 높이나 시야 범위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CPTED 적용 사업을 추진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범죄예방 관련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위원 2인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음. 	
54	12. 02. (금)	이예찬	<p>[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 2) 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거 취약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조사 대상 6,221명 중 1,726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022년에는 최소 12,6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복지서비스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조사의 세부 데이터는 서울시에 제출하고 난 뒤 별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실태조사 관련 홍보와 대면 조사에 활용되는 막대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황과 욕구 및 위험도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표본의 수와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해당 조사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관련 사업 및 정책 시행의 근거로 삼을 필요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특징, 욕구,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유형화해야 함.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 혹은 연구 용역을 통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55	12. 02. (금)	이예찬	<p>[공공기관 주최 실외 행사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1회용품의 경우 구매 예산, 사용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구청사와 주민센터의 경우 다회용 컵 사업을 통해, 해당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음. ○ 그러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외 행사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행사에 구매·사용되는 1회용품에 관한 내용이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별다른 통제 없이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 그리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실외 행사의 경우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야 함. ○ 더불어 해당 행사의 일회용품 사용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1회용품 사용·구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56	12. 05. (월)	이예찬	<p>[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올해 6월, 당산동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이유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영등포구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해당 조례에 따라 관계 부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소음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경우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 층간소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 됨. 이에 따른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권고 조치도 철저히 점검하여 주택건설 시 층간 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공동주택에 매년 공문을 발송하여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대상 141개 단지 중 약 50개의 단지에서 지원자가 없어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설치되었더라도 유명무실한 상황임.</p> <p>○ 또 층간소음 민원의 경우 서울시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민원 처리 속도가 더디고 만족도가 낮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p>	<p>음 차단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p>
57	12. 05. (월)	이예찬	<p>[위반건축물 근절 위한 시정 조치 실효성 확보]</p> <p>○ 10.29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무허가 건물·불법 증축이 지적되기도 함. 위반건축물 개선은 구민의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p> <p>○ 2021년 기준 관내 무허가·무신고 위반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555건이고 부과액은 20억 5천89백만 원에 달하고 있음.</p> <p>○ 이 중 실제 징수건수는 2,445건(95.7%)이고 징수액은 19억 4천2백만 원(94.3%)으로 미징수금액은 1억1천7백만 원으로 나타남.</p> <p>○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부과액이 적어 강제성 있는 위반건축물 근절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미미함.</p>	<p>○ 철저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야 함.</p> <p>○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1차 시정명령 미이행시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p> <p>○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위반건축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8	12. 05. (월)	이예찬	<p>[중증장애인 생활체육 이용 현황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44.3%는 운동 의지가 있음에도 현재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38.8%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12.1%는 ‘체육 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함. ○ 관내 중증장애인 인구는 2020년 기준 4,944명인데 반해, 영등포구 내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없음. 5인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장애인 체육회에 속해 있으나, 모두 복지관 내 단체 프로그램 운영 인력임. 관내 공공 체육시설은 단 한명의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도 채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관내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동의 의지가 있더라도 생활체육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중증장애인의 생활체육 이용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이 제한적으로나마 관내에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함.
59	11. 28. (월)	차인영	<p>[바닥신호등의 잦은 고장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신호등 신호제어기가 2010년 기준 신형/구형에 따라 고장 발생. ○ 21년도 이후 구형 신호제어기 횡단보도의 경우 제어기 교체 공사를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습’관리에 유리한 제조업체와 계약, 준공 후 불량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수리 및 교체가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바닥신호등의 제품인증종류가 자치구마다 다르며, 몇몇의 제품만 정부가 인정한 KC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현재 제각각인 인증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신호등은 방열과 방습관리가 중요한데, 현재 습기 관리가 부족하여 잦은 고장이 원인. ○ 내년(2023년) 관련 예산으로 8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A/S 기간은 3년이며, 고장건수 21개가 도래될 예정. 	<p>통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p>
60	11. 29. (화)	차인영	<p>[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및 사업성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공공태양광 설치는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도림동 배드민턴전용실내체육관, 영등포구청(별관), 영등포공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량이 발전예정량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림동 배드민턴실내체육관: 코로나 19관련 시설 미개방으로 최소량만 가동. - 영등포공원: 디자인태양광시설로 패널각이 평면각으로 효율이 떨어짐. - 영등포구청: 태양광시설 이전으로 패널훼손 및 음영발생. 영등포구청 별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21년 발전량이 1,967kw로 전기요금 환산시 61만원이 절약되나 최초 설치비용이 14,200천원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약 23년이 소요되므로, 사업성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술개발로 기술력이 높아져서 발전효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경제성으로 접근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효율이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시기까지는 공공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지양 필요함. ○ 친환경적 사업 추진은 지자체의 의무일 수 있지만, 미약한 전기절감액과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오는 문제 등 수리비와 운영비를 고려할 때, 투자액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1	11. 29. (화)	차인영	<p>[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관내 화물운송 업체 현황으로는 166개 업체 3259대 등록되어있음. ○ 화물운송업체의 하도급과 진입차 제도로 인해 관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화물운송업체와 차량의 차고지 파악이 힘든 상황임. ○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외곽에 많은 상황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실제 화물차량과 차고지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중점보호시설도 파악 바람. ○ 제도적으로 힘든 상황이니,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계도 필요.
62	11. 30. (수)	차인영	<p>[영등포구 폐기물 수집운반 현황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폐기물 수거업체는 6개 업체에서 6권역을 12년 이상 담당하여 수거하고 있음. ○ 관련 업종의 진입장벽이 높아 다른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p>- 영등포구: 106,967ton/17,323,528천원 - 송파구: 151,499ton/20,637,435천원 - 서초구: 134,262ton/20,921,058천원 - 강남구: 187,600ton/29,654,28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구에 비해 톤당 소요예산이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상 위반사항 제재기준 등 강화검토. ○ 대행업체 지도, 점검 인력증원 및 폐기물 세부점검 시행으로 감독기능 강화. ○ 청소대행권역과 소요예산, 폐기물수거량을 타 자치구와 비교 및 분석하여 효율적인 청소대행 권역을 재정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종사자의 인건비를 환경부에서 높게 책정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집행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검토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3	12. 01. (목)	차인영	<p>[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2019.04. 시행),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2019.09 시행) 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나 관내 제공기관이 없어 타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22년 10월 기준 부모연대라는 1곳이 생겼지만, 타구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강남, 서대문, 용산, 노원구는 제공기관이 4곳이며, 25개 자치구 위 두 사업의 제공기관이 1곳인 자치구는 영등포구 포함 4곳에 불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발굴 및 제공기관 추가 지정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우수 프로그램 및 대상자 성공사례 공유로 적극 발굴. ⇨ 수행기관의 다양화 추진. ○ 제공기관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지정 시 초기 사업비 일부 지원 방안. ⇨ 서비스 이용인의 활동서비스 지원시간 차감 개선.
64	12. 02. (금)	차인영	<p>[에너지바우처 사용률 개선에 대한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금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음. ○ 2017년 2511억 원, 2018년 575억 원, 2019년 699억 원, 2020년 750억 원, 2021년 973억 원, 2022년 136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사용액도 모두 536억 원에 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관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미신청가구 455가구로써 작년에 비해 153가구가 늘어남으로 신청자의 사용률이 84%로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함. ○ 겨울 바우처 발급액이 여름에 비해 10배나 많고, 미사용률도 3배가 많은 추세를 고려하여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일부를 여름에 당겨사용 할 수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2021년 5년간 전체 미사용액(536억 원)의 64.7%가 1인 가구(347억원)에서 발생했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미사용액은 235억 원, 노인은 220억 원에 달함. 	<p>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p>
65	12. 02. (금)	차인영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정비건 및 관련 위원회 재정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현재 영등포구 관내 아동학대판단 조사건수는 총 92건으로 학대는 53건에 해당하며, 현재 조사 중인 건이 30건에 달함. ○ 상기 조례 제7조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5조에 따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아동·여성지역연대의 활동은 전무한 상태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관련하여 심의를 대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선 재정비를 통해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조치·퇴소조치, 입양 등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원칙임으로 준수하여 혹여나 사후 심의로 진행하여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주의할 것.
66	12. 01. (목)	최인순	<p>[청소년자율문화공간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소년 자율 문화공간 조성 관련 예산 5억5천만 원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사업은 공간확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므로 6개 거점 공간에 대한 예산투자와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콘텐츠 개발. 문화공간에서 청소년들과 밀접 접촉하는 근로자관 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2020년에 명시이월, 2021년에는 사고이월된 사실이 지적되었음.</p> <p>○ 영등포구 전체 인구 중 청소년 인구는 약13,803명(3.67%)으로 올해 청소년 문화예산은 10월 기준 8억2천5백 원 가량 집행(약70%)되었으나,이 중에서 프로그램 비용은 약 3천7백만 원에 불과함.</p>	<p>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2022년 아동청소년복지과의 불법행위 단속 중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1회, 과태료 2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1회 있었음.)</p>
67	12. 01. (목)	최인순	<p>[생태어린이집 예산 운영관리의 문제점]</p> <p>○ 생태친화어린이집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확장되어 예산 증가 추이를 보임.(4년 동안 약 6억7천6백만 원)</p> <p>○ 생태친화사업은 외부활동을 통해 자연 친화교육사업이 주된 목적이므로 거리두기 적용으로 실내 활동이 많았던 코로나 시국에서의 사업확장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됨.</p>	<p>○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분기별 보조금 신청과 집행실적, 정산보고의 책임이 있음.</p> <p>○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육지원과 1번, 영등포육아종합지원센터 2번 받아서 비교분석한 결과 부모교육 강사비 지출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을 발견함.</p> <p>○ 생태친화어린이집 현황의 내용을 보면 2019년에 20개소로 시작하여 2022년에는 51개소로 확장되었음.</p> <p>○ 51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42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이 집중된 점은 형평성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됨. 향후 민간, 직장, 가정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p>
68	12. 01. (목)	최인순	<p>[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사업의 폐지검토]</p> <p>○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사업은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대행할</p>	<p>○ 영등포구의 260여 개의 어린이 집을 단 1명의 전문 관리관이 수도, 전기고장 수리, 보일러 점검 및 시설물 안전진단까지 전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한</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운영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총사업비가 3천7백48만원으로 어린이집에서 전문관의 필요시에 영등포육아보육정보센터로 신청하면 접수순으로 방문이 실시됨. ○ 2022년도 출장자료 확인 결과 3월~9월까지 7개월 동안 실적이 56회뿐이고, 내용은 안전진단 26회와 간단한 수리(경보수) 30회에 불과함. 	<p>무용지물 사업이 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를 잡지 못하고 예산집행에 비해서 어린이집에서 받는 혜택은 미비함. ○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폐지를 검토
69	12. 01. (목)	최인순	<p>[아동 돌봄시설의 위 수탁 협약 시 돌봄교사 (기간제)의 고용승계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돌봄시설의 돌봄교사 계약직 채용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돌봄교사들의 민원 제기로 2022년 3월 영등포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5년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올해 8월 돌봄교사 (기간제)를 추가모집하면서 채용공고에 채용조건으로 채용기간을 위수탁 계약종료일까지로 명시함. ○ 채용조건으로 수탁 기간의 계약종료일을 명시한 것은 5년 후 영등포구시설공단이 수탁 기간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8월 시설공단이 고용한 보육교사의 채용연장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교사는 돌봄이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기간제 채용이 아니라 2년 후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채용되어야 함. ○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면 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기관인 영등포구청에서 위수탁협약서에 수탁 기관은 기간제직 고용 승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0	12. 01. (목)	최인순	<p>[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감소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예산안에 근거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예상 징수율은 68%임. ○ 2023년도 기준으로 대략 1억 7천만 원 가량의 과태료 미징수로 인한 세입예산 손실이 발생이 예상된다. ○ 2027년까지 징수율을 10% 높이기로 계획하였지만,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징수된 과태료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율 향상에 나서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정차 위반 단속 부서와 연계하여 체납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2.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도록 실거주지 확인 후 송달. 3. 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
71	12. 01. (목)	최인순	<p>[배리어프리를 넘어선 이동약자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프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개념임. ○ 유니버설디자인은 보다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법적기준을 넘어서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안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배리어프리 관점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하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의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 수유’ 등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의 개선을 촉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유니버설디자인은 승강기나 교차로를 만들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p> <p>○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특정 대상만 우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당사자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문제도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발생하지 않음.</p>	
72	12. 01. (목)	최인순	<p>[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p> <p>○ 복지상담 콜센터,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나, 복지공무원과 주변 이웃 등에만 의존하는 사각지대 발굴은 한계가 있음.</p>	<p>○ 타 지자체(수원시, 가평군 등) 처럼 모바일메신저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p> <p>○ 위기가구들은 지병을 앓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병원에 의무 고용되어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 강화.</p> <p>○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업체, 우체국 등과의 조속한 업무 협력 체계 구축으로 위기정보의 공유 및 활용.</p>
73	12. 01. (목)	최인순	<p>[우리동네키움센터의 이용 우선 순위 및 미승인 메시지 발송에 대한 미흡한 안내]</p> <p>○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이용 확정이 되며,</p> <p>○ 신청 후 1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약현황이 초기화되어 '미승인'이라는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p>	<p>○ 정원 초과 시 우선순위 및 시스템 이용접수 후 1주일이 경과되면 미승인 메시지가 전송되는 점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안내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용신청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개선.</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이용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이 확정된다는 점과 신청 후 1주일이 지나면 예약 초기화가 된다는 안내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우 수 사 례	비 고
1	12. 01. (목)	이성수	<p>[주민주도적 자원순환도시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쓰다점빵(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을 모든동에 확대 실시하여, 26회 운영으로 재활용품 46,962kg 수거, 주요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교환 71,569장의 운영실적을 달성함. ○ 영재지원단(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 확대 운영 및 자원순환 전문 인력화로 쓰다점빵 운영, 분리배출 거점 관리, 재활용사업 주민홍보 실시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의 기반을 구축함. ○ 구형 분리수거함 교체·신규 27개소 설치,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대 19대 지원, 의류정거장 폐의류 268톤 수거 등 분리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기여함. ○ 향후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친환경제품 소개 등 주요 재활용사업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향상과 주민 참여형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2	12. 01. (목)	유승용	<p>[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성공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지원과에서는 2019. 8.부터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산지 지자체와 1:1협약을 통해 공공급식 시설에 직거래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식재료 품목 및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군산시와 교차산지를 적극 추진하여 영유아 급식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우 수 사 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산지체험, 식생활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급식 참여 시설을 확대하였음. ○ 어린이집 공공급식 이용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2020년(98.8%), 2021년(97.7%), 2022년(95.3%)로 높은 사업성과를 나타냄. 	
3	12. 01. (목)	유승용	<p>[2022 다문화정책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서울시 협력을 통한 ‘영등포 출입국 민원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3동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성격의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를 조성. ○ 외국인밀집지역 특별 방역대책 집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9. 대림동 외국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지역.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임원도시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다문화도시 5개 협의회 정기회 개최 등 임원도시로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 - 협회비 지원사업 및 시비(중국동포 사회통합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사업비 확보. - 영등포구 관내 3개소에 다문화를 담은 ‘다담서고’ 조성. ○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다누리교실(학교) 및 세계문화체험교실(어린이 집) 운영. - 지역주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이달의 문화다양성 한줄」 칼럼 운영. - 다문화 소식지 ‘영등포한울’ 및 이주민 안내책자 ‘웰컴레터’ 발행.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우 수 사 례	비 고
4	12. 01. (목)	이순우	<p>[영등포구가족센터의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가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평가에서 평가점수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기관 35개소에 선정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함. ○ 평가항목은 4개 분야로 (아이돌봄서비스 성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확보 및 활동참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 인프라)에서 총 100점 만점 중 81.2점(A등급)의 점수를 받음.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74,830건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냄. ○ 또한 6차에 걸친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을 통한 67명의 아이돌보미 추가 확보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내 실화에 기여하였음. 	